



대장동 수사의
실상

7면

덩샤오핑과
개혁·개방

8~10면

정의당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까?

11면

건축 예산안
비판

12~13면

한국 판
인도-태평양 전략

15면



중국 반정부 시위 4~6면

화물연대 투쟁과 반윤석열 투쟁은 만나야 한다

관련 기사 2, 3, 16면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박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노동자 개개인에게 면허 정지·취소와 사법 처리(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를 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 한파에 먹고살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생계 수단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비열한 짓거리다.

당장 일부 건설 현장이 마비되는 등 파업 효과가 커진 시멘트 운송 분야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됐다. 다른 분야로도 파업 효과가 커지자 정부는 정유·철강 부문으로 확대하려 한다.

윤석열은 범정부적 파업 파괴 대책본부(재난안전본부)를 구성하며 전방위적 탄압에 나섰다. 각료들은 연일 험한 말을 쏟아 내며 저항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파업을 지속하면 가중 처벌하겠다고거나,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시켜 버리겠다고거나,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면서 말이다.

이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대(對)노동계급 전쟁 선포다.

파렴치

얼토당토않게도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으로 규정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속에서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선 노동자 저항을 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비극에 견주다니 그 뻔뻔함과 파렴치에 치가 떨린다. 윤석열이야말로 평범한 청년들의 안전을 내팽개쳐 비극을 만든 경찰력 오·남용자 아니던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공권력과 경찰력 배치 우선순위가 낳은 비극이다. 윤석열의 경찰력 배치 기본 방침에 따라 그날 경찰은 공안(집회 통제), ‘마약과의 전쟁’, 대통령 경비에 집중했다. 그러는 사이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서울 중심지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



부는 기업의 이윤 보호를 우선하느라 노동자들의 생존 외침을 깔아뭉개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에서 공히 확인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만큼, 민주노총 지도부는 단 하루일지라도 실질적인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윤석열에게 사과와 “엄중 경고”만 말할 게 아니라, 윤석열을 정면 겨냥해 퇴진을 내걸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화물연대 투쟁과 퇴진운동은 같은 적을 상대하고 있다

윤석열의 강경 탄압은 이 파업이 경제적·정치적 파장을 일으켜 정부의 위기를 재촉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다.

윤석열은 취임 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일부 마비되고 정부 지지율이 떨어졌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막고자 안달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탄압은 정부에 대한 노동 대중의 분노를 키우고, 윤석열 퇴진 정서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매주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촛불행동’은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화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퇴진이 답이다” 등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 파업은 화물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내건 투쟁일지라도, 정권의 수장인 윤석열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정부와 사용자들이 모두 달려들 만큼 정치적인 성격이 매우 짙다. 퇴진 운동이 커

지고 깊어질수록 화물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하다.

이번 파업은 현 정세 속에서 세력 균형의 추가 어디로 기울지 가능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이 화물 노동자자들의 투쟁을 흠뻑 지지·엄호해야 할 이유이다.

독일의 혁명가 로자록셈부르크는 정치 투쟁이 경제 투쟁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다시 경제 투쟁이 정치 투쟁을 강화하는 상호작용을 통찰력 있게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지 441호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과 그 시너지 효과 — 록셈부르크의 통찰’을 보시오.)

이태원 참사 비극에,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법치주의 내세운 권위주의에 분노하는 사람들 모두는 윤석열이라는 같은 적을 상대하고 있다.

화물연대 투쟁과 퇴진운동이 만나면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연대〉독자들이 12월 2일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포항 철강 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응원합니다. 화물연대 투쟁” 손팻말과 배너를 부착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를 다졌다.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이 12월 2일 유조차(오일탱크로리)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앞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 집회를 가졌다. 노동자들은 “힘이 난다.” “이런 젊은이들을 보니 미래가 밝다”며 기뻐했다.

“민생 불모”, “사회적 약자 때리기”? NO! 서민의 생계 저항 대표한다

윤석열과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은 화물연대가 “국가 물류와 민생을 불모”로 명분 없는 폐쇄기나 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일주일 만에 1조 6000억 원의 산업 손실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민 경제”가 다 망가지게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걱정하는 “국민 경제”는 기업의 경제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삶과 저항을 짓밟아야 기업의 착취 활동이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데도 고유가·고금리 때문에 매달 수백만 원씩

소득이 줄어 생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맞선 투쟁은 광범한 대중의 생계비 고통을 대표하는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물류 공급 차질은 오히려 그동안 화물 노동자들이 경제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 흐르도록 연결하는 중요한 일을 해왔다. 그런 만큼, 그 물류를 멈춰 세울 힘도 있다.

이 투쟁이 성과를 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계비 위기의 대안을 화물 노동자들은 보여 주고 있다.



11월 28일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

대체수송 저지 투쟁은 파업 효과와 단결에 효과적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주요 항만과 컨테이너기지, 시멘트·정유·철강·타이어 공장 등 거점에서 봉쇄 투쟁을 하고 있다. 대열을 짓고 천막 농성을 하면서 비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호소하고, 불참자들을 설득해 돌려보내고, 파업 참가자들의 결속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은 이를 두고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 “동료 괴롭히기”라며 거품을 물고 사법 처리를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봉쇄 투쟁은 파업 효과를 높이고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 방식이다. 국제 노동운동에서 ‘피켓라인’(파업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열)이라고 일컬어지는 역사가 깊은 전술이다.

피켓라인은 중요한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가져다 주곤 했다. 1970년대 초반 영국 보수당 정부를 끌어내린 광부 파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화물 노동자들이 피켓라인을 형성해 싸웠다. 가령, 2003년에 부산항과 의왕 기지 등을 봉쇄한 덕분에 화물차 20만 대의 운행을 막아 정부의 양보를 얻어 냈다. 지난 6월에도 자동차, 석유화학단지, 컨테이너기지 등이 부분 마비됐다.

정부와 기업들이 봉쇄 투쟁에 진저리를 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전술은 동료 괴롭히기이기엔커녕 노동자들을 결속시키고 모두의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요구는 화물연대 조합원만이 아니라 비조합원들의 오랜 바람이다.



11월 26일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흔쾌히 화물연대 파업 지지 인증샷을 찍는 참가자들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울린 “응원한다! 화물연대 파업”

촛불행동, 화물연대 투쟁 지지를 공식화하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최대 10만 명까지 규모를 키우며 커지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촛불행동’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집회 참가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 왔다.

11월 26일 집회에서는 사회를 맡은 안진걸 촛불승리전환행동 공동대표가 “윤석열 폭압에 맞서 싸우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자”며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사람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응했다.

특히 촛불행동은 윤석열이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11월 29일 “화물연대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3일 집회를 알리는 웹 홍보물에서도 화물연대 투쟁을 부각하며 “윤석열은 업무 중단하고 퇴진하라”를 주요 구호로 걸었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반갑게도 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 부위원장님이 참가해 발언하기로 했다.

〈노동자 연대〉 독자들의 화물연대 투쟁 지지 활동

11월 26일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노동자 연대〉 독자들은 화물연대 투쟁 지지를 호소하는 호외를 나눠 주고, 화물연대 파업 지지 인증샷 캠페인을 벌였다.

화물 노동자들이 유가(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에 맞서 저항에 나섰다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다. 화물연대 투쟁을 탄압하는 윤석열에 대한 불만도 표했다.

캠페인에 대한 호응은 뜨거웠다. 어떤 부스에서는 인증샷을 찍으려고 줄을 섰다. 가족이 함께 지지 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약속을 어긴 거 아닌가요. 물류를 멈춰서 꼭 이겼으면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응원합니다.”

“화물 노동자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윤석열이 업무개시 명령을 하겠다고 계속 말하던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할 짓인가요? 미친 정부예요.”

“지난번 파업할 때 윤석열이 찢찢 매는 것 같아서 속시원했고 뉴스 보면서 응원했어요.”

“노동자들도 이쪽으로 오고 우리도 노동자 집회에 가면 좋지 않을까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탄압과 양보 사이에서 고심하는 중국 지도자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정치적 격동을 촉발하는 듯하다. 수도 베이징 일부 지역을 비롯해 많은 대도시에서 시행된 봉쇄 조치는 조만간 생산의 30퍼센트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는 광범한 저항을 부르고 있다. 가뜰이나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문의 붕괴가 낳은 충격으로 휘청거리는 와중에 말이다.

2007~2009년 국제 금융 위기 이래, 중국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은 주택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였고, 그 투자는 갈수록 온갖 사기 행각에서 재원을 끌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자 이 사상누각이 무너졌다. 팬데믹이 지나면 소비가 다시 진작돼 손실을 메우는 데에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오히려 경제에 갈수록 차질을 주고 있다.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려면 대대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지역을 봉쇄하고, 확진자를 정부가 감독하는 시설로 보내고, 국내외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 처음에 이 정책은 괜찮아 보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나 당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같은 자들의 직무유기와 치명적인 부실 대응에 견주면 특히 그랬다. 문제는 진정한 '제로 코로나'가 달성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 하나는, 2020~2021년 동안 18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가 고(故) 마이크 데이비스의 표현처럼 "변신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이 바이러스는 다른 균주에서 온 유전자를 접합해 새로운 변이로 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집단면역', 즉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거나 감염돼서 바이러스 확산이 더더지는 상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빠르게 확산되는 변이는 — 현재는 오미크론의 변이들이다 — 기존의 면역을 우회할 수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설사 감염을 막지 못하더라도 감염의 피해를 크게 줄여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두 주요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처럼 코로나바이러스의 단백질 돌기를 겨냥하는 mRNA 기반 백신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노인층 사이에서 백신에



진퇴양난의 처지가 된 시진핑

중국 당국은 백신이 아닌 '제로 코로나'에 주력해 왔다가 이 상태에서 봉쇄를 풀면 감염자·사망자가 속출할지도 모른다 봉쇄는 경제를 악화시키고 갈수록 반감을 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이 진압 경찰과 충돌했다. 그 노동자들은 입사를 위해 먼저 격리 생활을 해야 했던 신규 채용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사용자 측이 지키지 않은 것에 항의한 것이었다. 그 공장은 아이폰을 조립하는 공장이다.

그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구도 우루무치시(市)에서 화재가 일어나 10명이 숨졌다. 우루무치는 3개월째 봉쇄 상태이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망자를 낳은 원흉으로 지목됐다.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중국의 핵심 경제 중심지이자 지난봄에 두 달 동안 봉쇄된 상하이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서는 학생들이 두드러져 보인다. 베이징의 칭화대학교·베이징대학교에서 일어난 시위가 그런 사례다.

예일대학교의 중국인 연구자 장타이쑤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1989년 [텐안먼 항쟁] 이후 2019년 이전까지 중국의 시위들이 지역적이었던(그래서 중앙 정부에 덜 위협적이었던) 주된 이유는 정책 결정도 대개 분권적이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들을 아우르는 시위를 촉발할 전국적 초점이 없었던 것이다.

"코로나 방역은 일상 생활에 눈에 띄는 영향을 준 최초의 진정한 전국 단위 정책이라 할 만하다. 이 정책은 잘 먹히는 동안에는 중국 국가가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받는 데에 경제 호황기 이래 가장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늦어도 올해 1월까지). … 그러나 이 정책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자 … 그 결과는 지금 보는 바와 같다."

이제 시진핑 앞에 놓인 선택은 탄압이나 양보, 또는 가장 가능성 높기로는 탄압과 양보의 배합일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33호 / 번역 김준호

대한 거부가 널리 퍼져 있다. 80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을 3회 이상 접종받은 비율은 40퍼센트에 불과하다. 중국 보건 당국은 모든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이 상태에서 봉쇄를 풀면 3억 6300만 명이 감염되고, 580만 명이 중증 환자가 되고, 62만 명이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시진핑 정권은 진퇴양난이다. 게다가 봉쇄는 가뜰이나 안 좋은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봉쇄는 또한 갈수록 반감을 사고 있다. 든든하지도 않은 지원에 기대어 몇 달이고 자기 집에 갇혀 지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영화된 보건 체계는 이미 첨예한 정치 문제이고, 환자들은 제약 회사와 한통속인 의사들을 불신한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자아낸 불만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 11월 23일 정저우 폭스콘 대공장 노동자들

중국 마르크스주의자가 중국 반정부 시위에 대해 말하다

“중국에서 대중 행동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맞서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

홍콩 시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 람치 령에게 현 상황과 운동의 과제를 물었다. 람치령은 좌파 단체 '레프트21' 회원이다.

[] 안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신문 측이 넣은 것이다.

현재 시진핑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는 어느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2022년 11월 중순 이후 중국 본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11월 22~23일 정저우 시의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를 요구하고, [사측이] 지원금 지급, 임금 인상 약속을 어긴 것에 항의했습니다. 11월 25일 우루무치의 한 지역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봉쇄 울타리에 막혀 구조가 지연돼 결국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11월 26일부터 우루무치, 상하이, 베이징, 청두, 란저우, 우한 등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거나 대학생들이 학내 집회를 열어 우루무치 화재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봉쇄 조치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봉쇄가 아니라 자유를 원한다”, “봉쇄 해제하라!”, “언론의 자유!”, “404 안돼!”(404는 인터넷 검열을 의미하는데, 접속할 수 없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404라는 오류 코드가 화면에 뜬다), “노예가 아니라 시민이다!”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코로나 봉쇄를 위해 세워 둔] 철판과 울타리까지 철거했습니다.

이 시위는 1989년 이후 최대 규모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벌어진 저항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시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번 항의는 지난 10년간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답답한 상태를 타파하고, 갈수록 억압적이 되는 전제적 통치하에서 대중 행동의 돌파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7일 칭화대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둘째, 시위가 한 도시나 공장에 국한됐던 과거와 달리 이번 항의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1989년 이래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항의 시위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생활 수준과 고용 보장 같은 [경제적] 요구만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시위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2018년 이후 상하이를 비롯해 크고 작은 도시의 주민들은 대부분 전반적 경기 둔화 속에서 취업난(청년실업률은 이미 20퍼센트에 근접합니다)과 주거비, 생활 물가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 총리 리커창은 “월 수입이 1000위안(18만 원)도 되지 않는 사람이 중국에 6억 명(중국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실시된 엄격한 봉쇄 조치로 이미 불경기였던 경제가 더 나빠지고,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소상공인이 대거 파산하고, 농산물이 수확되지 않고 밭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가구들은 곤경에 처하고, 여성의 가족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여성과 아동이 가정폭력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대중을 가장 분노케 한 것은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모든 조치가 전적으

로 관료적 상명하달로 진행되며, 대중에게는 전염병에 관해 어떤 결정권도 없을 뿐 아니라 당국과의 기본적인 대화 채널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중국공산당은 오늘(2022년 11월 30일)까지 시위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태도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관영 매체 <인민일보>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봉쇄의 범위와 기간을 줄이는 약간의 양보를 하면서도, 거리와 학교의 시위대를 더 강경하게 진압하고, 더 신속하게 해산시키고, 더 많이 체포하려 할 것 같습니다.

중국 내 좌파 학생 조직이나 노동자 조직들은 최근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최근 4년 동안 중국 내 좌파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호된 탄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노동자 활동가나 좌파가 최근 상황에 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오주의자든 혁명적 사회주의자(트로츠키주의)든 현 상황에 대한 견해가 있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그들의 견해

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투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또,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저는 중국 대중의 항의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현재의 대중 항의 행동은 완전히 정당합니다. 우리는 저항에 대한 모든 탄압에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봉쇄 말고 자유”라는 구호를 지지하며, 언론의 자유와 집회·행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 검열을 모두 중단하고 연행자를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봉쇄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만든 관료도 엄벌해야 합니다.

동시에 각성된 시민과 학생에게 호소합니다. 당국이 대중의 항의 운동을 탄압하고 분열시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은 민주적 토론을 기초로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대중 행동이 ‘플래시 몹’ 방식의 부정형적 상태에 머물지 말고 아래에서 위로 조직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김영익·번역 이정구

용어 설명

동태적 제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감염자가 나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제로 코로나 정책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시진핑 정부에 항의하다

“봉쇄가 아니라 자유를 원한다!”

“독재가 아니라 자유를 원한다!”

기온이 영하로 급감한 11월 마지막 날 재한 중국인들이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 모여 시진핑 정부를 규탄했다. 시진핑 정부에 대한 중국 내 저항에 연대하는 시위가 한국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매서운 추위를 뚫고 재한 중국 청년들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중국 본토의 항의 운동 참가자들처럼 청년과 학생들이었다. 중국인이 다수였지만, 알음알음 소식을 듣고 연대하러 온 한국인들도 있었다. 홍대입구역을 오가던 젊은 한국인, 중국인들도 주변에서 응원하거나 참가하기도 했다.

강추위에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열기가 대단했다. 참가자들은 시위를 3시간 가까이 이어갔다. 시진핑 정부가 중국 내 항의 시위에 매우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주한 중국대사관의 감시와 통제가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매우 용기 있게 나선 것이다.

‘제로 코로나’로 3개월째 봉쇄된 신장 위구르 우루무치 시에서는 10명이 화재로 죽었다. 참가자들은 그 책임에 시진핑 정부의 정책이 있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한 중국인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우루무치시 사람들]이 왜 피해를 입었는지 똑똑히 보았다. [시진핑]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을 손 놓고 볼 수 없어서 나왔다. 정부는 우루무치 사건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참가자들은 자신이 왜 시진핑을 규탄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유롭게 말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시진핑 샤타이(下台, 하야하라)”

중국인 참가자들은 돌아가며 구호를 선창했다. “시진핑 샤타이(下台, 하야하라)”, “신문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구호에 호응이 컸다. 직접 만들어진 팻말에서도 시진핑 하야 요구가 눈에 띄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들도 ‘윤석열 물러나라’고 외치는데, 왜 우리는 ‘시진핑 물러나라’ 못 외치나. 시진핑 물러나라! 우리는 독재자 필요 없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이날 시위에는 중국인들의 저항에 연대하러 온 한국인 청년·학생들도 있었



우루무치 참사를 추모하고 시진핑을 규탄하는 참가자들 추운 날씨에도 100여 명이 넘는 재한 중국인들이 모였다

다. 발언에 나선 한 한국인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민주도 투쟁으로 오랜 독재를 끝장낸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집권당은 독재자의 후예들의 정당이며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고, 보통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 지난달 이태원에서 158명의 청년들이 죽었는데, 중국 우루무치에서 10명이 사망한 게 남의 일 같지 않다. 여러분의 투쟁을 지지한다.”

다른 대학생도 독재 정권을 겪은 나라의 청년으로서 동질감을 느낀다며 연대를 표하기도 했다. 중국인 참가자들은 한국인 청년들의 연대를 매우 고마

워했다.

이날 시위는 중국 본토 각지에서 시진핑 정부에 맞선 항의가 벌어지는 와중에 열렸다. 정말이지 본토 시위에 대한 연대의 장이었다. 참가자들은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단지 자가격리 수준이 아니라 공장, 단지, 지역 등을 통째로 봉쇄하고 제대로 된 음식과 물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사람들 대다수가 감옥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다. 그 와중에 우루무치 시에서 화재로 10명이 사망했고, 정저우 폭스콘 노동자들이 사측의 수당 지급 약속 파기에 파업을 벌였다. 이런 일들이 겹쳐

쌓여 온 불만의 기폭제가 됐다.

게다가 시진핑 집권 내내 중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했다. 청년 실업률은 18.2퍼센트에 이른다. 이에 대한 불만이 나올까 봐 시진핑은 억압을 강화해 왔다. 사실 제로 코로나도 그 일환이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대중의 저항은 시진핑 자체로 향하는 듯하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민주적 권리 억압 속에서도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시진핑 정부는 더 불안할 것이다.

이날 시위에 모인 중국인들은 상하이, 난징, 광저우, 우한 등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응원하며 “탄압이 거세져도 힘을 모으자”고 서로를 격려했다.

한편, 경찰은 집회 도중 기습적으로 집회장 주위를 노란 펜스로 (출입구도 없이!) 둘러싸고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도록 했다.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중국인 참가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펜스 바깥에서 있어야 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한 한국인 청년이 항의하자 그제서야 일부 펜스를 철거했다.

중국 본토와 재한 중국인들의 저항을 응원한다.

박혜신 노동자연대 청년학생 조직자



재한 중국인 시위에 연대한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들

집회 영상보기



대선자금 수사에서 대장동 수사로 오락가락하는 검찰

10월 하순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할 때는 마치 대장동 비리 수익금이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증거를 잡은 듯이 언론에 보도됐다.

게다가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 두명(김용, 정진상)을 구속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구속된 것만으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의 수익금이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용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상 구속영장은 뇌물죄 혐의를 적시했다. 유동규와 남육 등에게서 수익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용과 정진상, 둘 다 돈 받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받았고 그 돈이 이재명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 언론들은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검찰은 수사 표적이나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도 아직 확증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이재명 연루설을 뒷받침할 문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 문서도 그저 전해들은 말을 이용해 남육을 협박하는 것으로, 확정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검찰과 정부·여당은 확증도 전혀 없이 대장동 비리가 이재명이 기획한 범죄라고 확인한 셈이다. 사실 대선 때 윤석열은 TV 토론에서 이재명을 대놓고 범죄자 취급했다. 지금 대장동 수사가 정치 수사인 이유다.

물론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에 연루됐음이 확실한 증거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부패 범죄일 것이므로 대선자금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불평등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진보적 정치인이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대한 신뢰는 땅에 추락할 것이고, 평등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리 좌파의 눈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 이후 수사팀 교체

현재 검찰 수사는 대장동 주범으로



정치 수사 확증도 없이 대선자금 수사로 이재명을 공개 압박한 것은 법치를 앞세운 권위주의의 일환으로 보인다

불린 김만배, 남육, 유동규, 정영학 중 유동규·남육의 진술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 초기에는 천하동인 1호의 지분 일부가 유동규 것이라고 관련자들이 진술했다.

그런데 이제 유동규와 남육은 그 지분이 실은 유동규·김용·정진상의 공동 지분이며, 그 배후에는 이재명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뭘까? 정권이 바뀌었고, 올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됐다. 새로운 수사팀이 수사 방향을 바꾸자, 남육과 유동규의 진술이 달라진 것이다. 현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의 1기 수사팀의 기소 내용을 부정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유동규·남육의 바뀐 진술 중 무엇이 참말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검찰은 이 둘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두 석방 상태에서 재판판을 받도록 했다. 확증 제시 없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김용·정진상을 구속한 것과 대조적이다.

남육의 진술 대부분은 김만배에게서 들었다는 것이다. 김만배는 아직까지는 기존 진술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결국 주범들이 진술을 고수하든 변경하든, 모두 자신의 죄는 털고 자신이 혹

시라도 챙길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듯하다.

형량·석방 문제로 검찰과 거래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유동규와 남육이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고 싶다고 말한 것이 이를 암시한다.

검찰의 청구로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김만배·남육·정영학의 재산 800억 원을 동결한 것은 이들에게 새로운 압박이 될 듯하다.(추정보전 대상 총액은 대장동 예상 수익 전액인 4446억 원이다.)

한편,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대장동 초기 자금책이며 이후 286억 원의 배당을 받기로 한 조우형이 아직 수사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조우형도 최근 진술을 바꿨다. 조우형은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정진상을 모르고 문제의 지분은 유동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유동규·남육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우형이 초기에 조달한 자금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 받은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이 조우형의 변호사였고, 윤석열 수사팀은 그런 조우형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어찌

면 검찰은 이 의혹 때문이라도 이재명 혐의 입증에 더더욱 전력하는지도 모르겠다.

반윤석열 정서 약화용 수사

이런 사정들 보면, 확증도 없이 대선자금 수사로 이재명을 공개 압박한 것은 법치를 앞세운 권위주의의 일환으로 보인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 무라는 격이이기에 특히 그렇다.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개시 직후 이태원 참사, 윤석열 퇴진 운동, 화물연대 파업 등이 이어졌고, 반윤석열 정서가 고조되고 윤석열도 권위주의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의 속셈은 뻔하다. 윤석열을 반대하는 대중에게 대안 부재감을 안겨 줘 반윤석열 정서를 사기 저하시킬 계산인 것이다.

문재인에게 실망한 개혁 염원 대중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반우파 투표를 했고, 0.7퍼센트라는 근소한 표차로 이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아직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흠집내기의 정치적 의도에 넘어가선 안 된다.

김문성

중국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한 항의를 이해하기 위해 덩샤오핑과 개혁·개방을 돌아본다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이 글은 11월 29일에 갈
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
연대 온라인 토론회(QR
코드로 영상 보기)의 발
제문이다. 이 토론회는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여섯 번째 시간’이었다.



오늘 발제에서는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함께 중국 현대사의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흔히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덕분에 오늘날 중국이 경제 대국을 이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반쪽 진실입니다. 왜 그런지, 덩샤오핑 개혁·개방의 효과가 진짜로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에서 ‘마오쩌둥과 문화혁명’을 다루면서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 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오쩌둥이 죽자 마오의 권위에 의존해 권력을 장악했던 4인방이 몰락했습니다. 마오쩌둥에 이어 화궈펑(華國鋒)이 당 주석이 됐습니다. 화궈펑은 4인방을 체포해 재판에 회부하고, 문화혁명 때 고초를 겪었던 관료들을 복권시켰습니다.

그러나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과 완전히 단절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오쩌둥의 결정과 지시는 모두 옳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배 관료 내 개혁파는 이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문화혁명으로 파탄 난 경제를 수습하고 개혁·개방을 하고자 했는데, 만약 마오쩌둥이 모두 옳다면 문화혁명을 비판하고 경제 전략도 전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오쩌둥을 변호하는 화궈펑과 개혁파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분파는 진리 검증의 기준을 둘러싸고 이른바 ‘진리표준논쟁’을 벌였습니다. 중세 그리스도교의 스콜라주의 논쟁을 연상케 하는 그 논쟁의 본질은 사실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이전 발제에서 밝혔듯이, 마오쩌둥은 강력한 신중국 건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농촌의 빈곤은 사라지지 않았고, 제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적 사건이었던 1979년 미중 수교 장면(왼쪽)과 이를 추진한 덩샤오핑(오른쪽)

조업과 과학·기술도 정체했습니다. 1970년대 신흥공업국 4인방, 즉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중국 지배 관료는 마오쩌둥의 방식 탓에 중국이 뒤처졌다고 봤습니다.

당시 뒤처졌다는 낙오감을 느낀 것은 중국 지배계급만은 아니었습니다.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지배계급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방의 시장 자본주의가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경제 구조의 제한적 개혁과 부분적 시장 개방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시장 지향적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하고자 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바로 덩샤오핑이 이런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을 향한 탄탄대ろ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모순과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개혁·개방을 향하여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튼 시점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입니다. 그 회의에서 농가생산 책임제 도입, 국영기업 개혁, 경제특구 건설, 자본주의 국가와의 기술 교류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개혁 조처들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개혁은 농촌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오쩌둥 시기에 농촌 생활

세계적 경쟁 압력 속에서 추진된 개혁·개방



1970년대 서방 시장 자본주의의 빠른 성장
동구권 국가들, 뒤처졌다는 낙오감
→ 제한적 경제 개혁, 시장 개방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추진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농가생산책임제 도입, 국영기업 개혁, 경제특구 건설, 자본주의 국가와의 기술 교류

은 인민공사라는 기관을 통해 조직됐습니다. 인민공사 아래에는 생산대대와 생산대가 있었고, 대략 5천 가구가 속해 있었습니다. 인민공사는 농산물의 공동 생산과 분배, 공산품의 공동 구매와 소비, 기타 공산품의 배급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 체계는 농민을 기아에서 구원해 주긴 했지만 빈곤에서 해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들은 비밀리에 공동 토지를 자기들끼리 나눠서 경작하고는, 정해진 곡물량을 인민공사에 납부하고 남은 농산물을 챙겼습니다. 중국 당국은 점차 이런 방식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존 인민공사 체제보다 더 많은 목표 생산량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농가생산책임제입니다. 기존 인민공사 체제는 농민들을 공

동 경작지에 나와 일하게 하고, 노동점수에 따라 필수품을 배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농가생산책임제는 농민들에게 경작지를 나눠 주고 정해진 할당량이나 세금을 납부하면 나머지는 농민들이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농가생산책임제하에서는 농민들은 할당받은 토지에서 어떤 곡물을 어떻게 생산할지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실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1982년 무렵에는 중국 전역에서 인민공사 체제가 해체되고 농가생산책임제가 도입됐습니다.

농촌에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향진기업의 등장입니다. 향진기업의 ‘향’과 ‘진’은 농촌의 말단 행정 단위입니다. > 9면으로 이어짐

국영기업 개혁

개혁 이전의 '단위' 체제
이익은 반납, 손실은 보전

↓ 비효율 개선 위해
국영기업 개혁

경영자에게 이윤 인센티브
보조금과 복지 중단



국영기업 개혁의 절정 '조대방소'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놔 준다"

큰 국영기업은
국가가 통제

→ 에너지·철강·통신망 등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작은 국영기업은
민간에 매각해
사기업화

→ 6000만 명 이상
노동자 해고

▶ 8면에서 이어짐

다. 향과 진에 등장한 민간기업이 바로 향진기업입니다.

향진기업의 전신은 인민공사 체제 하에 있던 농촌 국영기업이었습니다. 향진기업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에 농촌의 부족한 공산품을 조달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성장했습니다. 각종 농기구 생산에서 시작해 농산물 가공 및 포장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나중에는 도시와 해외의 시장을 겨냥한 공산품 생산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향진기업이 지방정부 관료와의 긴밀한 유착과 비호 속에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국영기업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의 국영기업은 단위(單位) 체제로 조직돼 있었습니다. 이 체제는 하나의 소유주와도 같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단위 체제하에서 평생 일하고 생활하고 복지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단위 체제는 이익이 생기면 국가에 반납하고 손실이 나면 국가가 지원

해 주는 제도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제도가 비효율을 낳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국영기업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1979년에 이윤 유보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단위 체제에서 생긴 이윤의 일부를 각 단위에 머무르게 해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1983년에는 일부 기업들에 이개세제도(利改稅制度)를 실시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이윤의 일부를 기업들에 귀속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들은 이윤에 대한 인센티브를 경영자에게 제공하지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987년에 청부경영책임제를 시행하면서 손실이 나면 경영자가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청부경영책임제는 경영자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국영기업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영기업 개혁의 절정에 해당하는 것은 1994년 국무원이 확정한 조대방소(抓大放小) 정책입니다. 큰 것은 잡

개혁의 폭과 속도를 둘러싼 지배 관료 내 갈등

보수파
천원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우려...
국영기업이 중심, 시장은 그 아래여야"

개혁파
덩샤오핑



"세계 자본주의 속에서
국제 경쟁력 갖추려면 시장 더 확대해야"

고 작은 것은 버린다는 뜻인데요. 큰 국영기업은 국가가 통제와 관리를 하고, 작은 국영기업은 민간에 매각해 사기업화한 것입니다.

이 정책으로 6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해고됐습니다. 한편, 국유기업으로 분류된 에너지, 철강, 석유, 통신망 등 기간산업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 개혁이 낳은 모순과 정치적 갈등

중국의 개혁·개방을 살펴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 하나는 바로 쌍궤제(雙軌制)입니다. 쌍궤제란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국영부문과, 시장을 허용하는 민간부문으로 경제를 나눠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1978년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경제는 거의 100퍼센트가 국영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앞서 말한 향진기업이 생겨나고, 1990년대 이후 민간기업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민간부문이 차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에만 해도 그 비중은 매우 작았습니다. 외자기업도 1980년대에는 광둥성과 푸젠성의 경제특구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궤제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국영부문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가격으로 생산물이 거래됐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시장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대개 관리가격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자들은 국가와 계약하는 생산물의 생산량을 줄이고 시장에서 판매할 생산물

의 양을 늘려,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부문 경제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중국 지배 관료는 시장을 도입한 중국 사회를 "사회주의 시장경제" 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부르면서 국영부문이 주(主)고 시장은 종(從)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달리 국가 계획이나 국영부문은 시장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 전체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압력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물론 국영부문도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 없는데요. 이는 제3장에서 다뤘습니다.

어쨌든 개혁 조치 덕분에 경제 상황이 마오쩌둥 시절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농산물 생산이 증대해 농촌에서 빈곤과 아사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만성적 과잉인구가 향진기업에 고용되면서 농촌의 소득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변화는 도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도시 국영기업의 경영자들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윤을 재투자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민간기업들도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개혁의 폭과 속도를 둘러싼 지배계급 내의 갈등을 불렀습니다. 민간부문 경제가 급성장하자 덩샤오핑의 정적들인 보수파 관료는 중앙 국가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영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시장을 그 아래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덩샤오핑 지지 관료인 개혁파는 세계 자본주의 속에서 국제 경

▶ 10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쟁력을 갖추려면 시장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이 초래한 경제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관료들 사이의 긴장은 더 높아졌습니다. 민간기업이 대폭 증가하면서 당국은 원자재와 산출물의 수요와 공급을 가능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잉이,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해는 경기 호황이 그 다음 해에는 불황이 번갈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보수파는 이런 경제적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확대가 물자 부족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도 물가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물가 상승은 도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냈습니다. 게다가 배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말입니다. 당국은 생계비 위기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인플레이를 억제해야 했지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한 것이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경기 과열과 불황의 빈번한 교차,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도시의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 관료들은 민간기업을 만들거나 유착하면서 온갖 부정부패로 부를 쌓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시장개혁으로 절대빈곤층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개혁·개방 과정에서 쌓인 불만은 지배계급 내의 균열을 비집고 1980년대 후반 일련의 저항과 1989년 톈안먼 항쟁으로 폭발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저항

사실 덩샤오핑은 경제 개혁 초기에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개혁파는 마오쩌둥 시절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어서 변화에 대한 큰 대중적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덩샤오핑은 도시 지식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문화 영역에서 자유화를 어느 정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도, 자유의 확대도 아니었습니다. 1978~1980년 아래로부터의 저항인 민주주의 벽 운동이 일어나고, 덩샤오핑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자 덩샤오핑은 탄압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낳은 모순은 1989년 톈안먼 항쟁의 배경이 됐다

보수파와 개혁파는 경제 정책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노동자를 착취하고 청년학생들을 억압하는 데서는 한 편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지하’ 잡지들이 발간되고 자유언론을 칭송하는 시설이 발간되자(‘베이징의 봄’) 이를 “부르주아적 자유화”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를 억누르고자 기꺼이 ‘마오쩌둥주의’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인민일보>의 부편집장 왕뤄수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소외 문제가 있다며 마르크스주의의 출발점으로 휴머니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휴머니즘과 소외론을 부르주아 자유화의 한 종류라고 비난하며 ‘정신오염 제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저항을 제압하려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경제 개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1980년대 중국 지배계급 내에는 경제와 정치 영역 모두에서 급진적 개혁을 지지하는 관료도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 주석인 후야오방(胡耀邦)은 민주화 운동에 우호적이었고, 덩샤오핑과 원로들의 퇴진을 공공연히 주장했습니다.

후야오방은 공산당 외부의 민주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고, ‘베이징의 봄’ 운동과 1985~86년의 학생운동을 지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1987년에 정치

개혁·개방의 모순

경기 과열과 불황의 빈번한 교차
인플레이션

국가 관료들 부정부패로 치부
도시 노동자와 청년 생활수준 하락

절대빈곤층 줄었지만 빈부격차 더 커져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9년 4월 15일 그의 사망을 계기로 민주화를 바라던 학생들이 저항에 나서면서 톈안먼 항쟁이 시작됐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을 시작해 경제 구조를 바꾸고 마오쩌둥이 전횡하던 정치 관행을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력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였지 마오쩌둥 시절 착취받고 억압 받았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청년학생들의 해방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이 공산당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폭을 제한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착취 강화를 지지했고, 이들에게 반란의

기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청년학생들을 단속했습니다.

덩샤오핑은 1989년 톈안먼 항쟁을 진압하고 나서 오히려 더 급속히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톈안먼 항쟁 진압을 통해 한편으로 양상쿤과 리펅 등 보수파를 제압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 저항의 예봉을 미리 꺾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는 평가가 흔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불평등 증대와 술한 탄압과 톈안먼 대량 학살 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자본주의 환경이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태원 참사 이후 매주 수만 명이 “퇴진이 추모”라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 속에는 정의당의 동참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심심찮게 있다.

정의당은 유일한 원내 좌파(정확히는 중도 좌파 또는 온건 좌파) 정당이다. 그런 당이 윤석열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운동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의당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도 퇴진은 요구하지 않는다. 정의당 좌파 그룹 ‘전환’도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지난 호에 실린 ‘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를 보시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그 이유를 다음 같이 말했다.

“지금 정의당의 당론은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 요구다. 당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는 가지 않고 있다.”(《폴리뉴스》, 11월 23일자)

그러나 대통령 사과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의 책임에 합당한 요구가 못 된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경찰력·공권력 배치 우선순위에서 직접 비롯된,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다. 경찰이 대중의 안전보다 공안(집회 통제), 불균형한 ‘마약과의 전쟁’, 대통령실 경비를 우선한 탓에,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해 158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로 말할 것 같으면, 정의당도 그것의 문제점을 모르는 듯하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 대표는 “호통 국조, 정쟁 국조”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도 국민의힘이 “누더기 국정조사, 진흙탕 국정조사”를 만들까 봐 우려했다.

아닌 게 아니라 벌써부터 그럴 조짐이 보인다. 그럼에도 이정미 대표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항의의 진정한 전장

정의당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이 아니라 국회를 이태원 참사 항의의 전장으로 택했을까?

우선, 정의당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미심쩍게 보고 있는 듯하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렇게 말



현정 질서 안에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

했다.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구호로 매주 진행된 촛불 집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라는 구호가 하나 더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한 정의당 활동가는 “선거 때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SNS에서 퇴진 촛불 집회를 광고한다”고 말했다.

방금 전까지(어쩌면 지금도) ‘민주당 2중대론’ 논쟁으로 홍역을 치른 당인지라,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듯하다.

그러나 본지가 11월 한 달 동안 현장 관찰을 한 바, 윤석열 퇴진 운동과 민주당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지난 호에 실린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를 보시오.)

사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과 대동소이한 쪽은 윤석열 퇴진 운동 측이 아니라 정의당이다. 대통령 사과, 주무 부처 장관 사퇴, 국정조사 등을 놓고 말이다.

정의당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당의 목적·목표 및 성격과 관련 있다.

정의당은 현정 질서의 틀 안에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심상정 의원이 말하는 “헌법 내 진보”) 정당이다. 그래서 현정 질서에 따른 정권 교체가 아닌 대중의 힘으로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상황을 기피한다.

이런 노선에 따라 정의당은 선거와 의회를 제일 중요한 정치 영역으로 본다.

물론 선거와 의회가 백해무익한 것은 아니다. 선거나 의회에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쪽이 세를 늘리는 것은 대중 운동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대중 투쟁이 의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전장이다.

의회는 기업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주로 지배한다. 그래서 의회 협상은 언제나 노동계급의 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물을 내놓는다.(사실 대중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개악안이 개혁 입법보다 더 빈번하게 의회에서 통과된다.)

정의당은 의회를 가장 중요한 활동 영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협에 계속 순응한다. 이정미 대표는 이런

게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300명 구성원 중 일부입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것도 함께 못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치를 못 하는 거죠.”(《한겨레》 11월 5일자)

그래서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투쟁도 하지만, 국민의힘과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미흡할지라도 가령 안전사고 재발 방지 입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정의당은 중대시민재해와 재난안전기본법 제정을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대책”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런 접근법을 따르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서는 아무런 성과물을 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이끌릴 것이다. 그래서 대중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장관 몇 명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에서 그친다.

정의당은 의회 활동을 중시하면서 운동과 정치를 분리한다. 이정미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 탄핵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어떤 목소리 낼 거냐는 다른 각도의 문제다.”(《폴리뉴스》 11월 23일자)

그러나 정의당이 추구하는 꽤 많은 개혁을 성취하려면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권력자(사용자들을 포함한)의 힘을 약화시키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가령 건강보험 제도, 민주적 권리 신장 등은 매우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대중 투쟁의 산물이었다.

사실 정의당의 성장도 대중 운동에 빚을 진 것이다.

정의당은 2012년 창당 이래 몇 해 동안 거의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의당이 성장한 것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 운동 이후 약 두 해 동안이었다.

2017년 대선에서 정의당이 200만 표를 넘게 득표한 것도 박근혜 퇴진 운동 덕분이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때 정의당은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선호했지만(“질서 있는 하야”), 어쨌든 촛불 운동을 결국 지지했다.

정의당은 지배계급(기업주들과 국가관료)의 처지를 고려하지 말고 윤석열에게 분노한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려야 한다.

김인식

부유층과 사용자들 이익만 챙겨 주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

강동훈

연말 들어 정부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쫓겨나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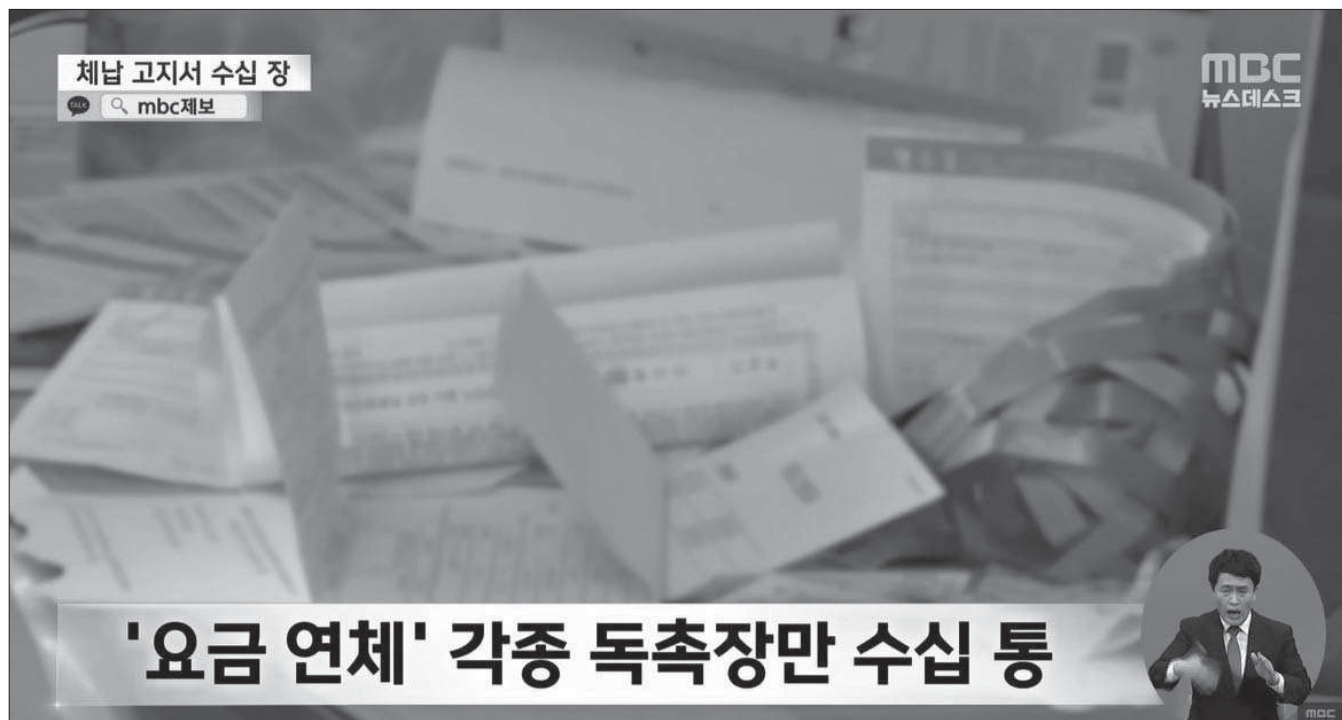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은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는 긴축 예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국회가 심의 중인 정부 예산안 규모는 639조 원으로,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40조 5000억 원이나 줄었다.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 가계부채와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 장부를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복지 예산을 5.6퍼센트 늘렸으며 “약자 복지”에 힘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해 물가상승률이 5퍼센트 이상이고,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퍼센트 이상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복지 지출은 삭감된 것과 같다.

정부가 삭감했다고 밝힌 ‘남비성 예산’ 16조 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지원 사업 예산(5조 6000억 원),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예산(6724억 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생활고 때문에 또다시 벌어진 비극 서민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게 뻔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복지 지출을 줄이고 있다

(922억 원) 등이 포함됐다.

“민생만 긴축 예산”(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내년에 고용·성장·수출 전망 등도 뒤틀림질 치고 있어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복지 지출을 줄이고 있으니 서민층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려 물가 상승도 부추기고 있다. 고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석유값 급등으로 화물 노동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석유 세금을 절감 감면해 주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다. 이때문에 화물 노동자들은 생계난에 내몰려 파업에 나섰지만 윤석열은 적반하장으로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삭감을 위해 공공부문 인력 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수차례 벌어진 철도 사고에서 보듯

인력 부족으로 철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도 5년간 법인세·소득세·종부세를 60조 2000억 원이나 감면해 주려 한다. 또 향후 5년간 16조 원이 넘는 국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해 부유층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려 한다.

경제 위기 시기에 이렇게 긴축 예산으로 대기업·부유층의 부담을 덜어 주고, 대신에 부담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패악 중 하나이다.

재정건전성은 금과옥조인가?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엄청난 국가부채 때문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46.9퍼센트로,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과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 주려고 하는 것을 봐도 재원이 없어서 긴축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긴축 재정은 복지 삭감을 노린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다. 특히, 1990년대부터 주요국 정부들

은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복지 지출을 줄였다. 서민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빈부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그러나 막상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업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 정부들은 재정건전성을 내팽개쳤다. 예를 들어, 2008~2009년 세계경제 위기 때 미국과 유럽 정부들은 기업과 부자들을 살리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물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수도룩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 반대’라는 구호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재정적자 문제가 커지자, 2010년부터는 긴축 정책을 본격화해 다시 복지와 임금을 삭감했다.

기업주와 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 있었다면, 노동자와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란 말인가?

또, 늘어난 재정 적자를 부자 증세로 메우면 안 될 이유도 없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은 정부와 기업주들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벌이는 계급투쟁 구호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변명에 휘둘러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더 근본적인 면들을 보면, 국가가 사

용하는 세금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부의 일부이다.

정부 지출 증대로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몫을 늘리는 일이다.

이런 정책들은 부자 증세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부유층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기업주와 부자들은 부자 증세를 좌절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들(자금 해외 유출, 대량 해고와 기업 폐쇄 등)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 긴축 반대 투쟁은 더 큰 투쟁으로 심증팔구 이어질 것이다.

이 투쟁을 근본적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대안이다.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때 정부와 기업주들은 흔히 ‘국가 경제’나 ‘경제 위기’를 들먹인다. 윤석열도 12월 2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억누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개악이나 각종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할 때도 그들은 같은 명분을 들이댄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2017~2021년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평균 2.34퍼센트였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팬데믹 첫해인 2020년 한 해뿐이다. 2021년에는 4.1퍼센트 성장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성장의 혜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적지 않은 노동자들은 오히려 여러 해 동안 실질임금 삭감을 감내해야 했다. 특히 올해 들어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했다.

이처럼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데도 노동자 소득이 줄어든 것은 결국 기업주와 부유층의 몫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위기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998년 IMF 위기나 2007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때 한국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기업주와 부자들은 이런 상황



상시적인 경쟁 속에 있는 기업주들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에 결코 보답하지 않는다. 11월 28일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 파업중인 화물 노동자들

에서도 고통을 분담하거나 희생을 감내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그들은 경제가 더한층의 위기로 빠질 것을 예상하면서 투자를 줄여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조차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는 결코 불가피하거나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 실질 임금과 복지 삭감, 외주화, 금리 인상, 심지어 물가 인상조차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기업주들과 그들의 정부의 의도적인 선택이다.

이를 위해, 기업주들과 그들의 정부 는 경제 위기로 노동자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길 원한다.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훗날 보답과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그들은 바란다.

온건한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개혁주의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두 참말이 아니다.

1997년 IMF를 불러들인 경제 위기

직후, 다수 노동자들은 생활고를 감수 해서라도 일자리를 지키길 바라는 심정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런 ‘희생’은 더 큰 공격을 막지 못했다.

곧이어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비정규직 채용 등이 이어졌다. 공공부문에서만 무려 1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IMF 위기’에서 회복됐다고 하지만 그 뒤로 대기업은 더 비대해지고, 비정규직과 빈곤층은 늘어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공황 이후 조선업 노동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회사를 살려야 고용도 지킬 수 있다’며 양보 교섭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그것은 더한층의 희생 강요와 해고로 이어졌다. 조선업 노동자 전반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 요구받는 악순환을 겪어야 했다.

이런 사례들을 봐도,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면 노동자들의 삶이 자동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말은 참말이 아니다. 불황은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리지만 회복과 호황기에도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자동으로 누리지는 못한다.

노동자 희생론은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위한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이다.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주를 위한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에 맞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장호중

언 발에 오줌 누기 ‘안심전환대출’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려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인상됐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노동자 등 많은 서민층 사람들도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고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로 2억 원을 빌린 사람이 내는 원리금 상환액은 지

난해 월 50만 원에서 최근 월 130만여 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3퍼센트대였던 금리가 최근 6퍼센트를 넘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최고 금리가 이미 7퍼센트대로 올라섰고, 올해 안에 8퍼센트로 오를 수도 있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퍼센트대로 오를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주택담보대출을 3퍼센트대의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다.

그러나 9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

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금액은 7조 7139억 원으로, 올해 공급 목표(25조 원)의 30퍼센트를 겨우 넘겼다.

애초 신청 조건이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서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비판이 나오자, 11월 7일 집값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높였지만, 여전히 신청이 많지 않다.

서울의 주택 평균 시세가 7억~8억 원인 걸 고려하면 어지간한 주택 소유자들은 여전히 신청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 요건을 9억 원으로 더 높여 내년까지 5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

혔다. 그러나 정부는 담보가 없고 대출기간이 2년으로 짧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은 저금리 전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것이다.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찢끔찢끔 내놓는 대책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생계비 위기에 처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고 있다.

노동계 주요 지도부들은 대출 금리 인화와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대중 저항을 일으키려 애써야 한다.

강동훈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workerssolidarity.org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이슈 10분 정리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는 중국 시리즈
- 투쟁 취재 영상
- 맑시즘 강연 음원

총 470여 개 콘텐츠



채널 바로가기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D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4 8

서울 도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단을 외치다

러시아 철군! 나토 개입 중단! 윤석열 정부의 군사 지원 반대!



11월 26일 서울 보신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단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9개월 넘게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와 미국·나토는 전쟁을 더 위험한 수준으로 끌고 가고 있다.

얼마 전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벌어진 소동은 이 전쟁이 겹잡을 수 없이 번질 위험성을 잘 보여 줬다. 지난 3월, 5월 서울 반전 집회 참가자들이 경고한 확전 위험이 더 현실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러시아와 서방 모두 전쟁을 금방 끝낼 생각이 없다. 푸틴은 청년들을 추가로 징집하고 '핵 버튼'을 만지작 거리면서 이번 전쟁에서 쉽게 물러날 뜻이 없음을 보였다. 서방 열강도 고물가, 고금리, 기후위기에 아랑곳않고 더 많은 파괴와 살상을 위해 무기와 돈을 아낌없이 퍼붓고 있다.

한편,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이 군비를 늘리며 불안정성을 키우는 가운데, 한국에서 생산된 무기도 잔뜩 수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실제로 후방에서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반쯤은 인정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러시아 철군, 미국과 나토의 개입 중단만이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외치고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수출을 비판했다.

연단에서는 이원웅 노동자연대 활동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한국의 반전 운동이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를 강조했다.

“외신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우크라이나로 갈] 포탄을 수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외신을 통해 알아야 하는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또,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미국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 포탄을 보낸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게다가 ...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떨어진 재고를 채워 준 것이니 국방부의 해명은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전쟁은 러시아만 벌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도 전쟁을 벌이고, 한국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하는 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야만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몫을 하기 위해 모이신 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어서 이집트 난민 세이디 무함마드 씨가 발언했다. 한국 법무부 앞에서 난민 지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그는 함께 농성 중인 다른 이집트인 난

민 가족들과 같이 집회에 참가했다.

“전쟁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 야만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다른 나라를 전전하는 난민들이 돼야 했습니다.”

무함마드 씨는 모든 전쟁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국가 지도자들이고 희생당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뿐이라고 역설하며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그와 이집트 난민 가족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대학생 오수진 씨는 자신이 윤석열 퇴진 운동에도 참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은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무기 팔아 돈 벌고, 미국과 나토 편에 더 가까이 붙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 안전에는 관심 없는 윤석열 때문에 이태원에서 제 포래 158명이 희생당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전쟁 지원으로 수많은 청년들의 삶이 또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차도로 나가 시청 광장으로 행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낳은 위기가 심각한 만큼 많은 행인들이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잘한다!” 하면서 함께 손을 쳐들기도 했다. 시청 인근에 모인 서울민중대회 참가자들도 행진 대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시위와 행진을 지켜보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더라도 “왜 시위하는 거야?”, “한국이 방산 수출하잖아”라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오랫동안 서서 연설을 들으면서 생각을 곱씹는 이들도 있었다. 시위와 행진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과 한국 정부의 구실에 관해 물음을 던지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목소리가 커질수록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은근슬쩍 숨기거나, 'K-방산'의 성과로만 포장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바라고 한국 정부의 나토 지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반전 운동 건설에 더 많은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다.

김종환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로 위험한 한 걸음 더

11월 11일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처음으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내놓은 전략과 같은 이름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거센 도전을 꺾고 패권 지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이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사는 곳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60퍼센트를 차지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서 이뤄질 만큼 역동적인 곳이다.

미국은 이러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에 맞서 지배력을 유지해야 자국 패권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남중국해는 해상 운송의 절반이 지나는 중요한 바다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경제는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강대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은 자신의 전략을 발표할 장소를 동남아시아로 선택한 것이다.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도 나뉘도록 도모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는 것은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한층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도 "미국과 보폭을 맞추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우선순위 문제

윤석열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도 반대한다고 했다.

이는 모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에 유리한 기성 국제 질서를 옹호하면서 강조해 온 표현이다. 11월 13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점은 좀 더 직설적으로 강조됐다.

윤석열은 "아세안과의 연합훈련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미국 주도의 군사 협력이나 군사 연습



11월 13일 한미일 정상회담은 삼국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고, 이는 중국·북한 등의 경계와 반발을 샀다

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윤석열은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FTA) 업그레이드, 전기차·배터리·디지털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아세안 국가들에 제안했다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여러 곳에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의 발언이 "미 국무부 담화 듣는 것 같았다"며, "신냉전 질서로의 회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냉전 시대처럼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쪽을 완전히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지난 9월 SK 회장 최태원은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이 "[미·중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전략의 주요 원칙의 하나로 애써 "포용"을 꼽는 까닭이다. 아마 곧 공개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도 중국을 직접 겨냥한 진술은 피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에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장 김성환은 지난해 고려대 교수로서 공저한 논문에서 "미국 또는 중국이라는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도, 우선순위는 한미동맹

에 두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대중국 전략자산이자 미국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소비재나 생산재 교역이나 투자는 중국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해 나가되, 반도체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만큼은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환은 중국이 우위를 점한 동남아 개발원조에 한국도 뛰어들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남아로 전략적 시야를 넓히면 한미동맹에 기여하면서 나름의 이익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3월에 열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등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권위주의' 중국·러시아의 도전에 맞선 자국의 패권 추구를 정당화하고 동맹을 결집하려고 소집하는 회의이다.

또, 윤석열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일본이]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하며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두둔했다.

윤석열의 이런 행보는 미·중 갈등에

서 주로 비롯하는 인도-태평양 일대의 불안정을 더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장기작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대중 압박·봉쇄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바람에 한국이 "진영 대결의 장기말[장기작을 뜻함]"이 되게 됐다고 옳게 비판했다.

그러나 그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균형 외교" 기조를 무너뜨렸다고, 그 반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거리를 둬으로써)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실천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의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한미일 동맹에 반대하는 문제에서 민주당은 전혀 미답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갈등 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는 점차 불안정하고 유동적이 되고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는 선택이다.

김영익



화물 파업 현장 소식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투지를 불태우는 화물 노동자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탄압에도 굳건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주요 항만, 컨테이너 기지, 제철소·시멘트·정유·자동차 공장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일주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파업이 지속되면서 시멘트, 철강, 정유, 자동차 등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주요 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전국의 건설 현장 절반 이상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석유화학 업계도 평소의 30퍼센트까지 출하량이 줄었다. 이제 정유 공급 차질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은 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멈춰 세울 힘과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의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더욱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파업 파파에 혈안이다. 윤석열 자신이 맨 앞에 나서 고금리·고유가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파업 6일째에는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당장 파업 효과가 큰 시멘트 운송 화물 노동자들이 첫 대상이 됐다. 지금 공급 차질이 커지고 있는 정유, 철강 운송 노동자들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악랄하게도 손해배상 청구, 유가보조금 유예 및 제외,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까지 거론한다.

윤석열을 그냥 두면 노동자의 삶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탄압 공세에 분노와 반감도 커지고 있다.

주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진보정당들이 연이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매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행동'이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공식 발표한 것은 반갑다.

윤석열 퇴진 집회 측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했다는 소식을 접한 화물 노



“불법” 타령에 굴복하지 않겠다” 11월 29일 화물연대 광주본부 결의대회

동자들은 하나같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11월 29일에 즉각 ‘화물 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전국 파업 거점에서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파업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분노했다.

기아자동차 광주1공장 남문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한 화물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일하려고 그 비싼 장비 살 때, 윤석열이 10원 한 푼 보태 준 적 없다. 우리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노예가 아니다.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불법 타령에 굴복하지 않는다.”

광주에서 타이어를 운송하는 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윤석열을 이렇게 되받아쳤다.

“윤석열은 말끝마다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친다. 그러나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자유는 우리에게 있다. 이번에 강력하게 투쟁하고 윤석열 퇴진 운동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부산 신항 결의대회에서도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윤석열 업무중지명령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큰 박수를 받았다.

의왕 컨테이너 기지, 울산 신항, 인천 선광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서도 정부의 강경 탄압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밀어닥친 한파에도 삭발을 하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언급하는 발언들이 있었고 호응도 좋았다. “최순실이 박근혜 퇴진 촛불에 불을 당겼다면, 업무개시명령이 윤석열 퇴진 촛불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등 주요 노동단체들은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

한 윤석열과 정면으로 맞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된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은 다음 날 인천 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호히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번 대상으로 위협받고 있는 정유 운송 노동자들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투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올해 처음 노조를 결성하고, 대부분 이번 생애 첫 파업에 나섰다.

화물연대 에스오일지부 이금상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힘 있는 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같은 하층·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법과 원칙’을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빼앗길 것도 없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최소한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화물 운송노동자들은 생계비 위기에 직면한 많은 서민층을 대변한다.

강경한 탄압으로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굳건하게 저항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응원하자.

안우춘

온라인 토론

현 상황에 필요한 것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시너지

—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운다

12월 7일(수) 오후 8시 발제 김인식 (노동자 연대) 발행인

참가신청 bit.ly/meeting-new-1207